



보도자료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시점 2025. 7. 28.(월) 11:00 배포 2025. 7. 28.(월) 08:30

특허청(기술경찰), 이차전지 기술 해외유출 시도한 前 대기업 직원 불집아

- 특허청,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막아 천문학적인 피해 방지 -
-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 전직 팀장 1명 구속 등 총 3명 기소 -
- 특허청·검찰·국가정보원 간 긴밀한 협력과 피해기업의 협조로 해외유출 차단-

특허청(청장 김완기)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 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대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 기업의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허가 없이 빼돌린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 전직 팀장 A씨(48세, 구속) 등 총 3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 재택 노트북 등을 활용해 이차전지 관련 자료 3,000여장 촬영 >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년 10월경 대리인 C씨(35세, 불구속)를 통해 해외소재업체 대표를 만나는 등 이직을 고려하고 있던 중, ’23년 11월 팀장에서 면직된 후 퇴사를 결심하고, ’23년 11월부터 ’24년 2월 퇴사 시점까지 자택 등에서 업무용 노트북으로 피해기업 가상 PC에 접속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기업의 자료를 무단 반출하였으며, ’24년 10월경 피해 기업에 재직 중이던 B씨(45세 불구속, ’24년 12월 퇴사)를 통해 추가로 자료를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 이차전지 주요 품목의 셀 설계 정보(현재 수조원~십수조원의 계약 진행 중), ▶ 제품·기술 개발, 제조·원가 로드맵과 같은 중장기 종합 전략 자료, ▶ 음극재 등 핵심 소재 개발 정보(평가, 단가, 협력사 운영방안 등)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사진파일로는 3,000여장에 이르며, 이 중 일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 자료이다.

만약 A씨가 빼돌린 자료 중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핵심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해외로 유출되었다면, 피해기업의 십수조원대 계약규모,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 국내 이차전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규모는 예측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 기술경찰-검찰-국가정보원 간 긴밀한 협력과 피해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의 성과 >

기술경찰은 '24년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A씨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받아 바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24년 12월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서 3,000여장의 사진 파일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다. 이후 증거분석을 통해 A씨가 피해기업 직원 B씨를 만나 추가로 자료를 부정 취득한 사실 및 C씨를 통해 해외소재업체를 접촉한 사실 등을 발견하여 B씨, C씨를 추가로 입건하고 B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술경찰은 수사 전(全) 과정에 걸쳐서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와 협력하였고, 협력과정에서 A씨가 빼돌린 피해기업의 자료 중에 국가첨단 전략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받고, A씨를 구속 수사로 전환하여 송치하였다.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건에서 피해기업은 회사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기업은 보안위반 사고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대응해 왔으며, 적극적인 협조로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정확한 첩보,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과 수사·법률전문성을 가진 검찰의 긴밀한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속한 확인을 통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포함한 우리나라 이차전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허청 기술경찰은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방지에 앞장서왔고,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미래먹거리인 첨단기술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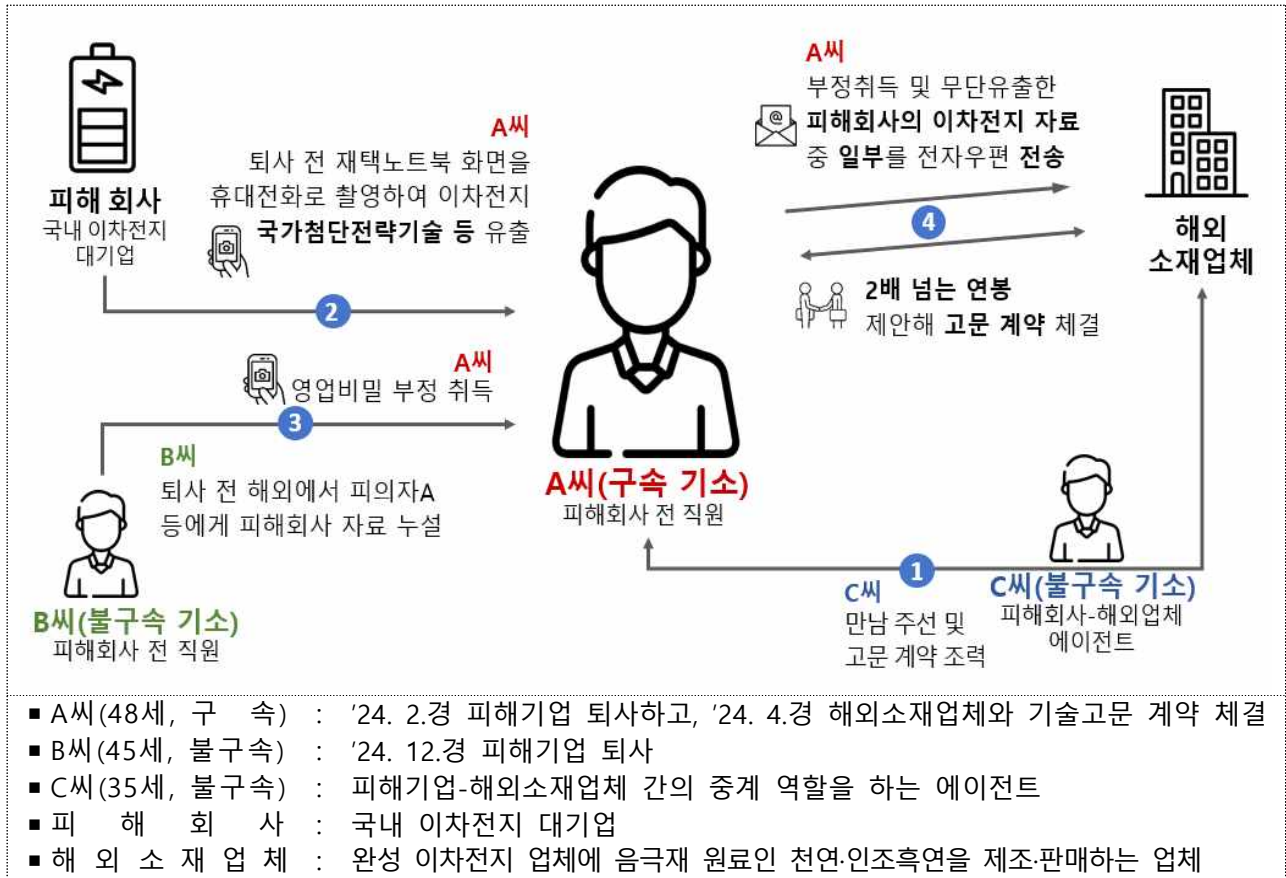
※ 붙임 1: 사건 및 수사개요

붙임 2: 이차전지 개요 및 주요 유출정보

붙임 3: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 개요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책임자	과 장	전일용 (042-481-3555)
		담당자	과학기술서기관	김길수 (042-481-5147)

□ 주요 범죄행위 요지



1 2 피해기업의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무단 유출

- '23. 10.경부터 A씨는 C씨를 통해 해외소재업체와 만나 이직을 논의하고, '23. 11.부터 '24. 2.까지 업무용 노트북 화면을 촬영하였고, 퇴직시 피해기업 자료삭제 의무에도 불구하고 삭제하지 않고 보유하여 [국가첨단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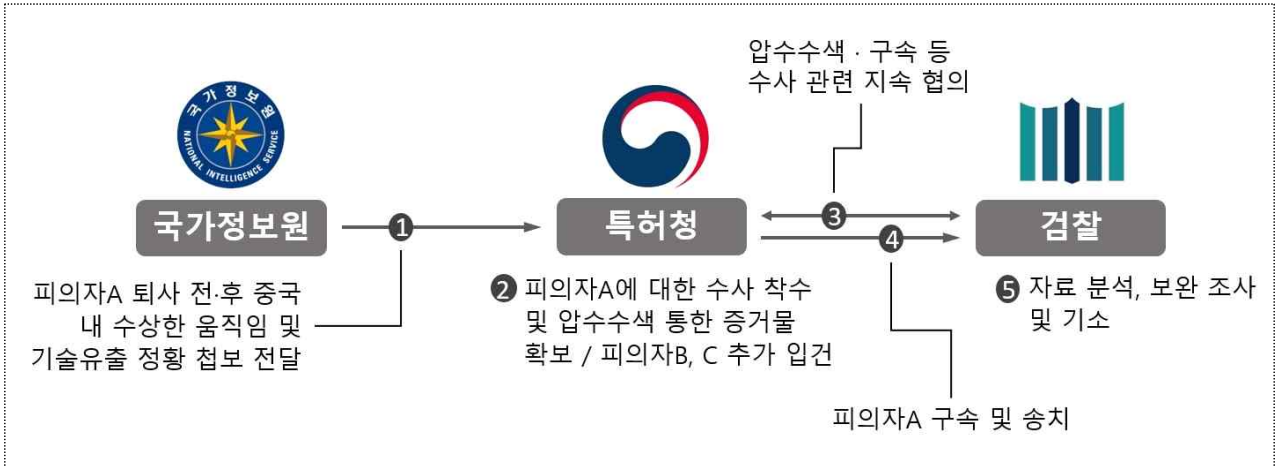
3 피해기업의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국외누설

- '24. 10.경 A씨는 해외에서 당시 피해기업 직원 B씨를 만나 B씨가 보여주는 피해기업의 회의록, 단가정보 등을 촬영하여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4 피해기업의 영업비밀 국외 부정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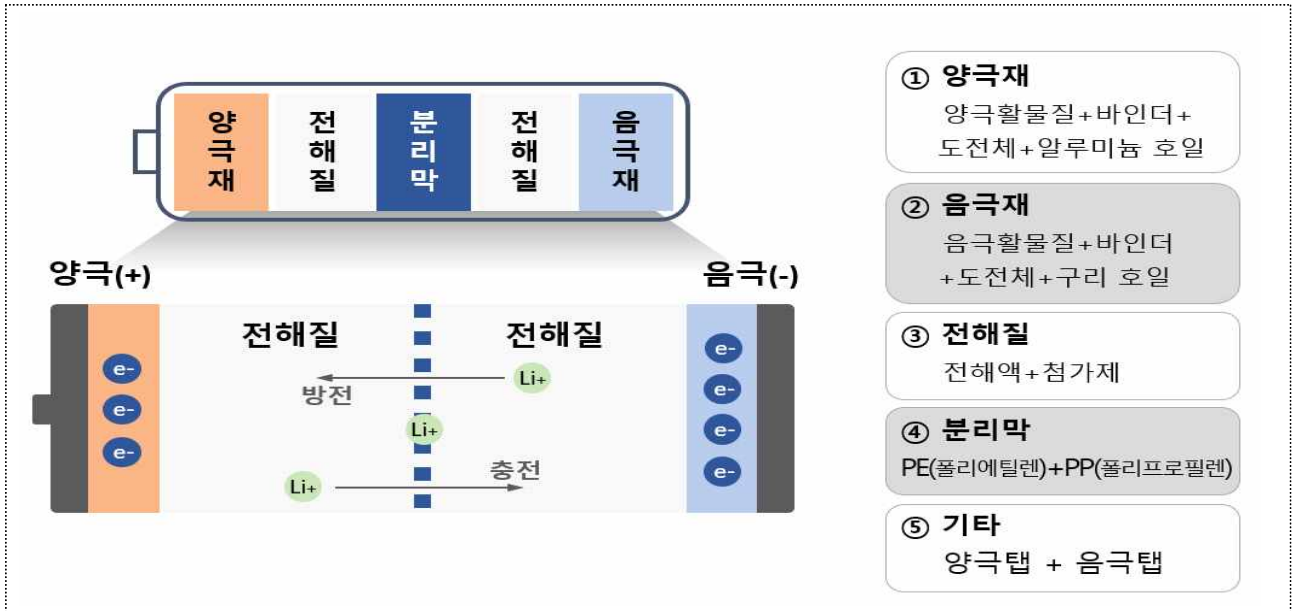
- '24. 2. 피해기업 퇴사후에 해외로 출국하여 '24. 3.부터 '24. 11.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해외소재업체 임직원에게 피해기업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 및 전송하여[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 주요 수사경과



- '24. 11.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피해기업 퇴직 직원 A씨에 대한 첩보 제공
- '24. 11. 21. 특허청 기술경찰, 수사 착수
- '24. 12. 2. 특허청 기술경찰, A씨 주거지 압수수색 실시
- '24. 12. 특허청 기술경찰, A씨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B씨, C씨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혐의 추가 인지
- '24. 12. 23. 특허청 기술경찰, B씨 주거지 압수수색 실시
- '25. 1. ~ 6. 특허청 기술경찰, 압수물 분석 및 A씨·B씨·C씨, 참고인 등 조사
- '25. 3.~5. 대전지검,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해당 여부 확인 요청 및 산업부 판정
- '25. 7. 8. 특허청 기술경찰, A씨에 대한 구속 송치
- '25. 7. 24. 대전지검, 송치자료 분석 등 보완 조사하고, 국가첨단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업무상배임 혐의 추가하여 A씨(구속), B씨(불구속), C씨 기소(불구속)

□ 이차전지 개요



- (정의) 충·방전시 전자가 양극↔음극 간에 이동하여,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를 이차전지라고 하며, 양극재·음극재·전해질·분리막으로 구성
- (시장상황) 전기자동차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급성장 중이며, 이차전지 기술 확보를 위해 주요국의 경쟁도 심화되는 상황
 - 특히, ①양극재·음극재·전해질·분리막 관련 소재기술, ②전지 설계 관련 셀(Cell) 기술, ③전지 제조 관련 공정기술에 등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집중

□ 주요 유출 정보

- 이 사건에서 A씨가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 등으로 확보한 자료들은 이차전지 셀(Cell) 정보, 중·장기 종합전략, 소재개발·평가 정보 등 관련 업계에서 엄격히 비밀로 관리하는 자료에 해당

이 사건 주요 유출 정보

주요품목 셀 정보	중·장기 종합전략 정보	소재 개발·평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양서 (예:BOM, 셀 조성 레시피) ■ 제품설계 도면 ■ 성능/품질 데이터 등 (예: 셀 평가 자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기술-제조(공정)-원가 로드맵 ■ 공급망 전략 등 (예: 협력사 운영 방안, 원재료 운영전략, 중장기 원재료 물동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 평가표/물성표 (예: 급속충전용 흑연 평가 자료, 표준음극재 물성표) ■ 신소재 개발 관련 자료 (예: 신규 Si/C 개발 자료)

□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정의)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
- (별칙)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 이차전지 관련 국가첨단전략기술 >

분야	산업명 및 세부 설명
1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산업 : 에너지밀도가 280Wh/kg 이상인 파우치형 배터리, 252Wh/kg 이상인 각형 배터리, 28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이하의 원통형 배터리, 26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초과하는 원통형 배터리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	고용량 양극재 산업 : 니켈함량이 80%를 초과하는 양극재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3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 : 600mAh/g 이상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4	배터리 제조업의 전·후방 산업 :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산업, 고용량 양극재 산업,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과 연계된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정의)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
- (별칙)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 이차전지 관련 국가핵심기술 >

분야	기술명
전기 전자	전기자동차용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65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90%)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전구체 포함)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

□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정의)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③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 (별칙)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